



의안번호	제 2025 - 8호
보 고 연 월 일	2025. 3. 24. (제13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목 차

<b>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b>	<b>1</b>
<b>II. 대법원장 접견 및 양형위원 개임, 임명장 수여식 개최</b>	<b>2</b>
1. 대법원장 위원장 접견	2
2. 임명장 수여식 개최	2
3. 대법원장 양형위원 접견	2
4. 양형위원 구성	2
<b>I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b>	<b>4</b>
1. 개요	4
2. 신규 위촉 대상자	4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4
4. 전문위원 구성	4
<b>IV. 자문위원 대법원장 접견, 신임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5차 자문회의 개최</b>	<b>6</b>
1. 대법원장 접견	6
2. 신임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6
3. 자문회의	6
4. 회의 의견 요지	6
<b>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 결과 보고</b>	<b>10</b>

---

1. 공청회 개요 .....	10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10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11
4. 공청회 방청객 의견 요지 .....	17
<b>VI.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b>	<b>19</b>
1. 개요 .....	19
2. 각 의견조회 결과 .....	20
<b>VII.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b>	<b>21</b>
1. 개요 .....	21
2. 관련 규정 .....	21
3. 공개 방법 .....	22
4. 추진 일정 .....	22
<b>VIII. 고용노동부장관 양형위원장 면담 .....</b>	<b>23</b>
1. 일시 및 장소 .....	23
2. 참석자 .....	23
3. 면담 내용 .....	23
<b>IX. 천고법치문화상금 경과 보고 .....</b>	<b>24</b>
1. 개요 .....	24
2. 의견 취합 .....	24
3. 집행 계획(안) 개관 .....	24

<b>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b>	<b>25</b>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25
2.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의견 보고 .....	28
3. 민원 우편 접수의견 보고 .....	30
□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	33
□ [별지2] 신임 수석전문위원 프로필 .....	34
□ [별지3] 고용노동부 의견서 .....	35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67차	2025. 3. 10. 15:00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제시된 공청회 의견, 관계기관 의견, 자문위원 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 II. 대법원장 접견 및 양형위원 개임, 임명장 수여식 개최

### 1. 대법원장 위원장 접견

- 일시 : 2025. 3. 24.(월) 15:30
- 장소 : 대법원 11층 소접견실
- 참석 : 대법원장, 위원장, 상임위원, 비서실장

### 2. 임명장 수여식 개최

- 일시 : 2025. 3. 24.(월) 15:40
- 장소 : 대법원 11층 대접견실
- 참석 : 대법원장, 위원장 및 위원, 비서실장
- 임명대상자 : 김대웅 신임 양형위원

### 3. 대법원장 양형위원 접견

- 일시 : 2025. 3. 24.(월) 15:45
- 장소 : 대법원 11층 대접견실
- 참석 : 대법원장, 위원장 및 위원, 비서실장

### 4. 양형위원 구성

[2025. 3. 24. 기준]

지위	성명	직위	위촉일자 (임명일자)
위원장	이 상 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27.
위원 (법관)	김 대 웅	서울고등법원장	2025. 3. 24.
	윤 승 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4. 27.

	최 환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2024. 2. 13.
	정 상 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24. 3. 25.
위원 (검사)	박 세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4. 10. 29.
	정 희 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24. 6. 17.
위원 (변호사)	이 재 현	변호사	2023. 4. 27.
	신 승 우	변호사	2024. 9. 30.
위원 (교수)	강 수 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27.
	김 혜 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 4. 27.
위원 (학식·경험)	박 장 호	MBC 보도본부장	2024. 1. 8.
	백 범 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2023. 4. 27.

※ 신임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 Ⅲ.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 1. 개요

- 2025. 2. 24.자로 김세중 수석전문위원 사임(퇴직)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 2. 신규 위촉 대상자

-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2025. 3. 10.자)

####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시 : 2025. 3. 24.(월) 16:10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이재신 신임 수석전문위원

#### 4. 전문위원 구성

[2025. 3. 24. 기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최초 위촉일
법원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5. 3. 10.
	이혜란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4. 4. 1.
	이혜량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판사	2024. 3. 2.
검찰	장유강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2024. 6. 10.
	이성화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2024. 2. 19.
변호사/ 군법무관	김현아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2023. 3. 7.
	최익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21. 8. 17.
	이준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연구 기획부장	2024. 5. 20.
교수/ 전문가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5. 16.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3. 4. 12.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8. 20.
	윤지영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 9. 9.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7. 5.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 7. 5.

※ 신임 수석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2] 신임 수석전문위원 프로파일  
기재와 같음

## **IV. 자문위원 대법원장 접견, 신임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식 및 제15차 자문회의 개최**

### **1. 대법원장 접견**

- 일시 : 2025. 2. 26.(수) 14:00~14:20
- 장소 : 대법원 11층 대접견실
- 참석 : 양형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비서실장, 상임위원,  
자문위원(10명), 운영지원단장

### **2. 신임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 일시 : 2025. 2. 26.(수) 14:30~14:35
- 장소 : 대법원 1605호 무궁화홀
-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대상자 : 이홍연 신임 자문위원

### **3. 자문회의**

- 일시 : 2025. 2. 26. (수) 14:35~16:00
- 장소 : 대법원 1605호 무궁화홀
- 참석 : 양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안건 :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및  
성범죄 각 양형기준안에 대한 자문의견

### **4. 회의 의견 요지**

#### **1) 제1안건: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 ▣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정의규정의 예견가

## 능성 요건 삭제

- 사기 피해자의 자살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판사가 양형에서 참작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예견가능성의 문제가 큰 의미가 없어 삭제 여부가 관계없어 보인다는 의견
  - 자기 책임이 없는데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 범죄의 성립여부로서의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닌 양형은 어느 정도 국민의 불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
  - 심리·정서적 영향을 받아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든가 하는 것들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예견가능성 등은 삭제해도 된다는 의견
  - 재산범죄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중인자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결국 양형은 재판장에게 재량권을 두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
  - 결과로 나오는 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예견가능성을 두고 안 두고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에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인해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를 삭제
- ‘허황된 욕심’, ‘단기간에 고수익’이라는 표현이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니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과한 것 같다는 의견
  - 상식 이상의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경계심을 더 갖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유지하자는 의견

- 문구를 빼다고 해도 충분히 감경인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 최근 10년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각종 코인이 만 배 이상 뛰는 등 사회적 현상이 이러한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에게 속은 사람들을 ‘허황된 욕심’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고, 피해자로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문구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자체가 핵심이어서, ‘허황된’ 문구 등은 당연히 빼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

## 2) 제2안건: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 ▣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감경인자로 설정한 것에 대한 적절성

- 경험상 동물학대라는 것이 인간인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처벌불원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
- 어느 정도 사람에 준해서는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다면 감경인자를 두는 것이 옳다는 의견
- 피해회복을 해주면 사람도 정상참작을 해주는데 굳이 이것을 뺄 이유는 없다는 의견
- 동물보호법을 논하는 데 있어 ‘피해 회복이 되었다’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취지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
- 동물보호법위반사례가 적고 새로이 설정되는 과정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동물의 사체를 극심하게 손괴하는 경우, 반성이 없는 경우 등 가중요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

## 3) 제3안건: 권고 형량범위의 적절성

### ▣ 각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적절성

- 사기범죄에서 서민들이 많이 당하는 피해 규모인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4) 기타 안건

- ▣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등의 관점에서 양형기준의 설정·수정이 필요한 범죄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
  - 공무원 범죄의 경우 뇌물범죄만 설정되어 있으므로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전반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
  - 성범죄 중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군으로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 앞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양형위원회 또는 양형기준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 기존의 양형기준에서 사용되는 양형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가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교정기관의 수용 정원이 과밀 상태이고 성범죄·마약범죄·사기범죄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이나 형사정책적으로 실행의 선고에 대한 고민을 할 때이고, 마약 단순투약, 정신질환자 등 교도소 수용보다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 대한 양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 단순히 형만 정하고 양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성범죄 가중요소 관련, '가학적·변태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표현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의견

## 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 결과 보고

###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5. 2. 17.(월) 14:00~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 현장 방청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 진행 내용 :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내지 설정안 발표, 지정토론 및 답변, 방청객 질의·답변

###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최 환 상임위원
- 발표자 : 김세종 수석전문위원
-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 토론자
  -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지정 토론자
  -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미량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 토론자
  -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1)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 일반]

-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큰 양형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조정하여 사기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박소현 입법조사관)

##### [유형 분류]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로 피해액을 수거한 수거책의 경우 우연히 수거하게 된 금액을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득액이 아닌 가담유형별로 별도로 유형화하자는 의견(박소현 입법조사관)
- 1인 범행, 비조직적 범행이라도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조직적 사기의 수준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조직적 사기’ 유형을 ‘불특정·다수대상 사기’ 유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라는 비례적 정의의 측면에서, 유형구분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형식적 이득액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사기죄보다 높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규모와 낮은 환급률 등을 고려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박중욱 부연구위원)



### [권고 형량범위]

- 형량의 강화가 바로 범죄예방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사기를 (보통 동기) 살인과 유사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인지 의문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이 소위 ‘형량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 [양형인자]

- 현금 수거, 인출, 전달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분담임에도 이를 ‘단순 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박소현 입법조사관)
-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은 타당하고, 형사공탁의 양형상 고려 여부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는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박중욱 부연구위원)

##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 [설정 범위]

- 대포통장은 신종 사기범죄를 통해 얻는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므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를 새로이 설정 범위에 포함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박중욱 부연구위원)

### [권고 형량범위]

-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점과 평균 형량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소유형 2(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기

본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 [양형인자]

- 조직적 범행에서 ‘단순 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적 범행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수인이 관여한 범행에 있어 각각의 가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특별양형인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박소현 입법조사관)

#### [집행유예 기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상당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서 실무를 고려하면 ‘생계형 범죄’가 일반참작사유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정유철 변호사)

### (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 일반]

- 동물보호법위반 양형기준 설정의 최우선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지만, ‘어떻게 해야 동물을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김광현 입법조사관)
- 양형위원회의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마련은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상당히 신속한 대응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박미량 교수)

#### [설정 범위]

-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가 확산되고, 경제적 수익을 위한 범행으로 연결될 사회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국화 변호사)

### [유형 분류]

- 범죄 유형을 피해동물이 죽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2가지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게 피해 결과 중심으로 단순화한 것이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박미랑 교수)

### [권고 형량범위]

- 벌금형만으로 교육·교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소유형 1의 가중영역에서 벌금형 권고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김광현 입법조사관)
- 감경영역에 전체 벌금형 선고 건수의 98.2%를 포섭할 수 있고, 통상 감경영역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고려한 것은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 선고된 판결 분석에 의존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박미랑 교수)
- 다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법위반범죄도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권고 형량범위가 다소 낮다는 의견(서국화 변호사)

### [양형인자]

- 피해동물이 무주이거나 가해자 소유인 경우 피해 회복에 취약하므로, 피해동물에 대한 치료 등 축진을 위해 소유형 2(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치료를 통한 무주의 피해동물이나 자기소유 피해동물의 건강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광현 입법조사관),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길고양이 혹은 야생동물과 같이 소유자가 없거나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박미랑 교수)

- 동물학대의 양상이 죽이고 동물 사체를 해부하고 능욕하는 과정까지 촬영,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화하였음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박미랑 교수)
- 동물대상 범죄가 반복성과 상습성을 특징으로 함에도 범죄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관련하여 ‘범죄의 반복성, 피해동물의 수’가 주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국화 변호사)

#### [집행유예 기준]

- 동물보호법위반 행위자가 처벌받은 이후 피해동물에 대하여 재차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동물에 대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박미랑 교수)

### (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 일반]

-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였고,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맞물려 있어 근로자의 노동권·인격권 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번 양형기준 설정은 환영할만하다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 [설정 범위]

- 2021. 3. 23. 신설된 성착취목적대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선미화 경정)

#### [유형 분류]

-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보호법익 및 행위의 태양 등에 있어 추행 범죄와 엄연히 구별되므로, 대유형 1, 중유형 다.의 의제추행 다음에 위치시켜 추행범행과 구별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감경영역 ~1년6월, 기본영역 1년~2년6월, 가중영역 2년~3년)하자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 [권고 형량범위]

-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범죄자의 사회적 격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에도 법정형 상한에 비해 권고 형량범위가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선미화 경정)
-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권고 형량범위가 그 행위태양,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김혜정 소장)

#### [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를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에까지 적용한다면 가해자에게 이유 없이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 공탁의 양형상 고려는 재판부에서 여러 양형요소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등에서도 ‘(공탁 포함)’이 삭제되어야 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 개념이 모호하여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김혜정 소장)
- 특별가중인자인 ‘윤간’을 ‘2인 이상 범행 가담’으로 표현을 변경하

자는 의견(박현주 변호사),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는 성적 행위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거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윤간’의 용어를 ‘집단범행’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김혜정 소장)

- 일반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는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마약류 등 약물 이용’이라는 수단이 특별양형인자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와 비교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선미화 경정)
- ‘동종 전과’의 범위에 디지털 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성매매범죄가 포함되어야 하고, 일반가중인자인 ‘비난 동기’의 정의 규정에 ‘피해자가 소속된 동질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감’을 추가하자는 의견(김혜정 소장)

#### [집행유예 기준]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폭력에서 사회적 지위와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김혜정 소장)

## 4. 공청회 방청객 의견 요지

- 전세사기범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전세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되며, 사기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
-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피해금액이 줄어들면 그것을 양형의 감경사유로 계속 참작하고 있는데, 임대인

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형인자로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및 일반사기의 3유형은 10년형까지, 조직적 사기도 3유형은 15년형까지 올려야 피해자들 감정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피해대상은 동물이므로 사람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고 동물의 생명 보호라는 관계 법령의 목적에도 다소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특히 금전배상을 통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야기하고, 가해자에게 반성 없는 금전적 면죄부를 주게 될 우려도 있어 보여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감경인자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1유형의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보호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양서류와 어류 이런 동물들까지 산업동물 예도 들면서 벌금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일각에서는 종차별적이라고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지적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의견

## VI.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개요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 대상 기준안

- 양형위원회 제136차 회의(2025. 1. 13.)에서 의결한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 (2) 조회 기간

- 2025. 2. 20. ~ 2025. 3. 20.

#### (3) 회신 기관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7개 조회 대상 기관 중 8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개인 의견서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7개 조회 대상 기관 중 7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금융위원회, 보험범죄연구원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 39개 조회 대상 기관 중 8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42개 조회 대상 기관 중 8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각 의견조회 결과

(1)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1.과 같음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2.와 같음

(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3.과 같음

(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4.와 같음

## Ⅶ.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 2.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규칙

#####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 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5. 3. 24. 양형위원회 제137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5. 4. 초순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5. 4. 중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 **VIII. 고용노동부장관 양형위원장 면담**

###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 3. 11. (화) 16:30 ~ 17:00
- 장 소 : 양형위원회 위원장실(대법원 1501호)

### **2. 참석자**

- 고용노동부 : 장관, 노동정책실장, 근로감독기획과장
- 양형위원회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3. 면담 내용**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에 관한 고용노동부 의견 제출  
[별지3]

## IX. 천고법치문화상금 경과 보고

### 1. 개요

- 2024. 11. 20.(수) 천고법치 문화상 수상 및 부상으로 상금 수령
- 2025. 2. 27.(목)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승인
  - 안건 : 양형위원회 천고법치문화상 포상금 접수 여부

### 2. 의견 취합

- 전직원을 대상으로 필요 물품 및 사용처에 대한 의견 수렴하였음
- 상금의 공익적 목적과 수요를 종합하여 항목별 사용액을 배분하고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사용 계획안을 마련함

### 3. 집행 계획(안) 개관 (총액 2,868만 원)

- 운영지원단 설비 지원 (600만 원)
  - 각종 출장 및 행사용 공용 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및 태블릿PC 2대
- 복지 관련 물품 지급 (700만 원)
  - 화면보호기, 스타일러 2대
- 기념품 (1,000만 원)
  - 양형위원회 구성원 전체 / 무선이어폰
- 기부금 (300만 원)
  - 행정처 연계 단체 등에 기부
- 답례품 (268만 원)
  - 행정처 직원 전체 / 떡

※ 집행과정에서 일부 집행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1)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2)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5. 3. 5.까지 총 61건)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4. 12. 21.(1)	○ 양형위원회 존재 이유 설명 요청
2	2024. 12. 27. ~ 2025. 2. 11.(5)	○ 사기죄 형량 강화 요청
3	2024. 12. 28. ~ 2025. 2. 4.(2)	○ 반복민원
4	2024. 12. 29. ~2025. 1. 2.(3)	○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입법 및 형량 강화 요청
5	2025. 1. 8. (1)	○ 금융사기 형량 강화 요청
6	2025. 1. 13. ~ 2025. 2. 10.(8)	○ 취지불명
7	2025. 1. 14. ~ 2025. 2. 17.(40)	○ 개별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8	2025. 2. 20.(1)	○ 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 강화 요청

#### ○ 1번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

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입니다. 양형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기 위해 양형위원회 규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합니다.
- 그 밖에 귀하가 제기하신 양형기준 제도 자체의 당부나 양형위원회 존속에 관한 내용은 입법사항이므로,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취지에 관하여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 선고형량 등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의견 보고

(1)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5. 3. 5. 까지 총 2건)

연번	접수일자 (접수건수)	민원 요지
----	----------------	-------

1	2024. 12. 17.(1)	○입법 요청 및 약물복용 후 운전시 처벌 강화, 마약 등 각종 범죄 양형기준 가중요소에 음주일 경우 가중처벌, 사회취약계층대상 범죄시 사회적 영향력 악용 처벌 가중요소로 추가 요청 등
2	2025. 1. 4.(1)	○각종 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신속개정, 토론회 생략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약물복용 후 운전시 처벌 강화, 마약 등 각종 범죄 양형기준 가중요소에 음주일 경우 가중처벌, 사회취약계층대상 범죄시 사회적 영향력 악용요소를 처벌 가중요소로 추가 요청 등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 민원 우편 접수 의견 보고

(1)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5. 3. 5.까지 총 4건)

연번	접수일자 (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4. 12. 31.(1)	○ 개별 사건 양형 판단 요청
2	2025. 1. 13.(1)	○ 조직사기범죄 양형기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사기의 경우 사기 이득액을 전체 피해액으로 계산하게 할 것을 요청</li> <l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기이득액을 개인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으로 할 것을 요청</li> <li>- 조직 사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가벌성이 있는 모집책의 경우 처벌에 있어 과거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벌할 것을 요청</li> <li>- 조직사기의 조직을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자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의 제규정으로 처벌할 것을 요청</li> </ul> ○ 사기죄 형량 강화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
3	2025. 1. 14.(1)	○ 개별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판단 요청
4	2025. 2. 6.(1)	○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조론 교육을 채택할 것을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 및 판단, 선고 형량 등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입법,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적용법조 또는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안 및 사기죄 형량 강화·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설정해달라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 및 판단, 선고 형량 등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의견서

제출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에 관하여

#### 1. 임금채불의 심각성

지난해 임금채불 발생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나 증가하였고, 역대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피해근로자도 283,212명에 이르며, 건설업 등 경기 불황과 임금채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표1. 연도별 임금채불 발생액 및 피해자 수】

(단위: 억 원, 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발생액	13,505	13,472	17,845	20,448
피해자	247,005	237,501	275,432	283,212

임금채불은 단순한 사인(私人) 간의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며,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재산권이자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채불은 근로자 개인이 제공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인격권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채불은 노동시장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재산권과 생존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임금채불을 '임금절도(Wage theft)' 또는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상식 중의 상식’임에도 이러한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에 오히려 만연해 있습니다. 임금체불 범죄가 발생 빈도에 있어 ‘23년도에 특별법 범죄 중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2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 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①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 등 경기 불황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의 증가, 일부 대기업 집단의 대규모 임금체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릇된 문화와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을 형사벌(범죄)로 다루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임금체불을 해도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악의적이고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임금체불죄 피의자는 ‘인건비는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2025년 3월 5일 언론에 보도된 사업주는 10여 년간 약 5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2024년 1월

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임금체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② (낮은 수준의 처벌) 고용노동부가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검찰이 기소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징역형은 3.5%에 불과하였으며, 체불액 대비 벌금액 30% 미만이 77.6%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임금체불죄 피의자의 경우 2020년 1월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된 횟수가 105건에 달하는 상습 체불사업주였으나, 그동안 벌금형만 10회 걸쳐 받았을 뿐 자유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건설업을 하는 피의자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체불로 신고된 횟수가 343건에 이르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였으나 17번에 걸쳐 소액의 벌금형만 받았을 뿐입니다. 또 다른 피고인은 직원 1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1억 6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음에도 벌금 500만 원만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체불을 해도 낮은 수준의 처벌만 받는다는 사실을 학습한 체불사업주들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 소규모·영세 사업장('24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의 71.4% 발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24년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 피해자 89,000여 명)들로서 체불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자력으로 구제받을 여건에 있지 못해 대다수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③ (국민의 법 감정 반영)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임금체불의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59.5%를 차지하는 등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2. 임금체불 범죄 처벌 수준 설문조사 결과(2025년)】

(단위: 명, %)

구분	계	①처벌수준이 높다		②처벌수준이 적당하다		③처벌수준이 낮다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전체	1,025	67	6.5	348	34.0	610	59.5
남성	539	40	7.4	172	31.9	327	60.7
여성	486	27	5.6	176	36.2	283	58.2

④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력) 정부는 임금체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협력을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운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제5기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마련되었으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체불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10년 가까이 지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3.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안

① 먼저, 현재 체불액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예시: 5개 유형)하고, 최근 일부 대기업 집단에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요청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3. 범죄유형 세분화 및 양형기준 강화 요청안】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0월	8월 ~ 1년 2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6월 ~ 10월	8월 ~ 1년 2월	10월 ~ 1년 8월
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8월 ~ 1년 2월	1년 ~ 1년 6월	1년 6월 ~ 2년 6월
5	5억 원 이상	1년 ~ 1년 6월	1년 2월 ~ 2년	1년 8월 ~ 3년

② 한편,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대다수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범죄나 교통범죄, 스토킹범죄와 같이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③ 또한, 체불로 인한 피해자 수와 체불기간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신설하여 임금체불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금액의 체불이라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와 장기간에 걸친 체불의 경우는 그 평가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신설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4. 특별양형인자 신설 요청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의적인 미지급</li> <li>• <u>(개정) 피해근로자 30명 이상 등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u></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u>(신설) 연속하여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3월 이상</u></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④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수백억 원 대의 임금체불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를 수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5.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신설 요청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li> <li>•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li> <li>• <u>(신설) 체불임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자수 또는 내부고발</li> <li>• 형사처벌 전력없음</li> <li>•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 4. 나가며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임금채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채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것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근로자가 제각기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 원칙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행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귀 위원회를 비롯한 사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안이 귀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 3. 11.

대법원 양형위원회 귀중